

한국 개발경험의 대아프리카 공유 방안**

박 수 덕*

I. 머리말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아프리카 정부의 good governance와 민주화를 ODA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치체제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내부정치에는 눈을 감고 자원 확보 등 경제 관계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운가?”

“한국은 총 GDP의 50% 이상을 대외 수출을 통하여 창출해내며 대부분의 산업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를 자원공급원이나 수출시장으로 생각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원조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중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2010년 12월 초 아프리카 차세대지도자 방한 초청사업에 참가한 콩고민주공화국과 가나 참가자의 질문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는 물론 비동맹그룹의 맹주였던 중국에 대해서도

불신을 감추지 않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한국은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국은 아프리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문해 본다.

필자는 작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죄셉 카빌라 대통령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카빌라 대통령은 방한기간중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내전은 끝났다. 지금은 빈곤·미개발과 또 다른 전투를 치르고 있다. … 이 전투를 이겨내는 것이 민주콩고에는 커다란 도전이며, … 이 엄청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 … 한국이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

아프리카인들은 더 이상 서방 국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앙골라는 냉전시대 미·소간 대리전의 장소가 되었고, 나이지리아와 알제리의 방대한 유전은 서방의 석유메이저 회사들과 부패한 관료들 간의 거래 속에서

* 외교통상부 아프리카과장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자원의 저주’를 낳았으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에서는 서방국가들의 위선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진출이 활발한 중국이 서방국가와 다른 큰 차이점은 협력 대상국가의 정치체제나 민주주의, 인권상황 등에 크게 개의치 않으며,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최근 아프리카 고도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아프리카간 교역액은 20배 이상 증가하여 1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차이나프리카(ChinAfrica)’ 신드롬은 중국-아프리카의 동반 경제성장과 함께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중국의 대규모 차관과 중국인 노동인력을 활용하여 패키지로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자원을 가져가는 형태의 협력은 현지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이 자원의 보고이자 수출시장인 아프리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대국이 앞 다투어 아프리카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뒤쳐질까봐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고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아프리카를 접근하게 되면 과거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오류와 시행착오에서 우리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 카빌라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믿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

다. 우리나라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와 내전, 기아와 빈곤의 고통을 겪었다.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단기간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그에 더하여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꿈꾸는 G20 회원국이 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정서적 공감대를 가지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열렬히 배우고 싶어 한다. 이것은 여타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 바로 여기에서 아프리카와 한국이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 원원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형 개발경험’을 자화자찬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의 역사, 현재의 정치·사회 상황과 개발단계를 무시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 경제적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이슈들을 마주해야 하며, 계몽된 국익(enlightened national interest)의 관점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아야 할 것”²⁾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 ‘계몽된 국익’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해본다.

- ‘한국의 개발경험’이란 무엇인가?
- 한국의 경제발전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은 무엇인가?
-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현재 시점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어떻

게 적용 가능한가?

- 한국의 개발경험을 통해 아프리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필자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경험 공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개발경험’ 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 모델은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을 식민유산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를 반박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개발독재’ 모델은 서방이 개도국 경제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민주화 및 인권보호 등 정치적 조건부여(conditionalities)가 경제성장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되기도 한다.³⁾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개발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새마을운동’ 등 강력한 정부주도의 개발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 경제발전의 성공 요인에 대해 뚜렷한 정설은 없으며,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여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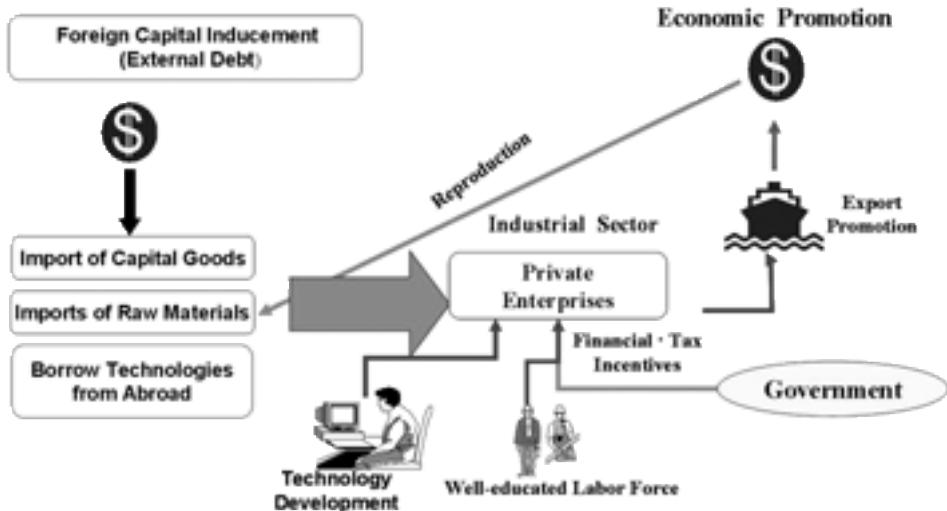
정치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리더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었으며⁴⁾, ‘새마을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을 통하여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로부터의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정치·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⁵⁾ 무엇보다 6·25 전쟁 이후 분단상황 하에서도 한국은 자주국방 노력과 아울러 미국 등 동맹국들의 협조에 힘입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공 배경일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 FDI에 비하여 정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 도입(1960~1970년대) (2) 수출지향적 공업화 (3) 중화학공업 등 선별적 유치산업 육성 (4) 초중등 및 기술교육 투자와 학습·모방을 통한 기술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⁶⁾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요청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했던 방식 그대로 차관 도입을 통해 공업화를 추진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중화학공업 등 유치산업을 육성하라고 조언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역사적·문화적 측면으로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유교문화를 수용해 오면서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식민지지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점이다.⁷⁾



〈그림 1〉 Flow of Outward–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Jin-sang Lee, 'Strategies for African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Lessons from Korea,' 2 December, 2010)

반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에 의해 식민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적·부족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가가 형성되었고, 아직까지 국가 보다는 부족문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식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 현재 아프리카 해당 국가들의 정치·사회 상황,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답습은 '개발경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개발과정이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되어 전달되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사례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은 역사·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아프

리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한국의 개발경험은 참고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개발모델을 찾으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커졌다.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개발 경험을 국가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중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하고도 구체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 발굴의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현재 국제경제질서와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현 시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과 한국과의 비교

아프리카 빈곤과 저개발의 핵심문제는 그들이 경제성장에 실패했다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개발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⁸⁾ 1960년 이후 45년간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연평균 0.5%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인 2.5%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⁹⁾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적 측면 외에 자연환경·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기후와 질병, 아프리카인들의 천성, 인종 및 종교의 분열, 서구식민지배의 유산,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관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IMF 등 제도권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민주적 정치제도가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등은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유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IMF나 세계은행이 처방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오히려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¹⁰⁾

이렇듯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의 아프리카 경제전문가인 폴 콜리어 교수는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으로 네 가지 뒷, 즉 (1) 분쟁의 뒷 (2) 천연자원의 뒷 (3)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뒷 (4) 작은 나라의 나쁜 통치의 뒷을 제시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중 복수의 뒷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까스로 한 가지 뒷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을 추진하려고 해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¹¹⁾

이 네 가지 뒷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바라보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뒷’에서 자유로웠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출중심의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이웃인 일본은 주요 자재 및 부품 공급처이자 수출 시장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바다와 면해 있지 않다.¹²⁾ 운송비용은 둘째 치고 연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하기란 어렵고 따라서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천연자원의 뒷’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개도국에서 값 비싸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발견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적개발과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해지고, 타 산업의 생산을 위축시키며, 자원 이권을 둘러싸고 ‘분쟁의 뒷’에 빠지게 되어, 자원이 ‘저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나이지리아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앞서 언급한 ‘내륙국의 뒷’에 비하면 비교적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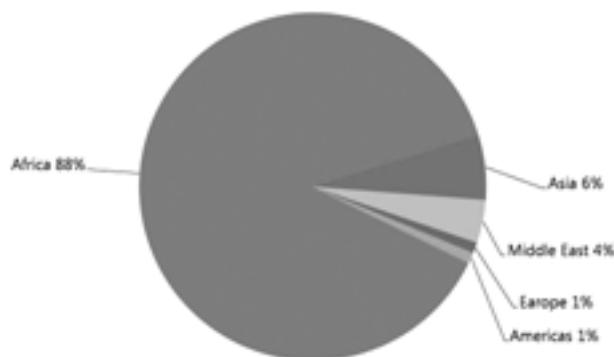
콜리어 교수가 제시한 ‘나쁜 통치(governance)의 뒷’은 다소 주관적이고 결과론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아직도 IMF/세계은행과 서구좌파 및 아프리카 국가들간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에 근거, 1960년대 초 우리의 상황을 유추하여 현재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버넌스를 비교했는데, 자유와 책임 면에서는 아프리카가 더 양호했을 수 있고, 정부 효율성이나 규제의 질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양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¹³⁾ 특히 거버넌스 문제중 아프리카에서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초기 매우 심각한 부패를 경험했지만 (1) 보편적 교육확산 (2) 객관적 공무원 선발제 도 (3) 성과주의 행정관리 시스템 등이

부패 억제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¹⁴⁾

마지막으로, 내전이나 쿠데타로 표출되는 ‘분쟁의 뒷’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 이후 발생한 분쟁에 의한 인명 사망률은 아프리카 지역의 전 세계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무력 쿠데타와 내전이 반복되어 왔다.¹⁵⁾ 분쟁은 재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질병을 유발하며, 나라 전체를 불안 속에 빠지게 해 ‘실패국가’를 만든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경우도 언제든 ‘분쟁의 뒷’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970년대 초기만 해도 한국안보를 가장 강력하게 보장한 것은 한미상호방위협정과 주한미군이었다. 미국은 1950년대에 한반도의 적화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1960년대에는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미간 안보정체성 갈등을 겪기는 하였으나,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한·미 연합사를 창설하는 등



〈그림 2〉 Post-Cold War conflict death tolls by region (Virgil Hawkins, Stealth Conflicts)

동맹관계를 제도화하였다.¹⁶⁾

그 후 남북한간 안보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문제를 본질적으로 국가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현실주의적이면서 평화주의적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민간부문이 경제 발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¹⁷⁾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국방·안보 기술협력 등을 통해 아프리카 분쟁 방지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IV. 개발을 위한 환경과 국제 질서의 변화

앞서 예시한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1960~198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환경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국제환경은 매우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는 1947년부터 1989년간 미·소 간 양극체제 하에서 냉전을 겪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등 아프리카는 종족 간 분열과 함께 냉전시대 동서진영의 대리 전쟁의 장이 되었고, 무분별한 원조와 무기지원이 이어졌다. 냉전시대 동서 진영간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한반도가 여러 순간 긴장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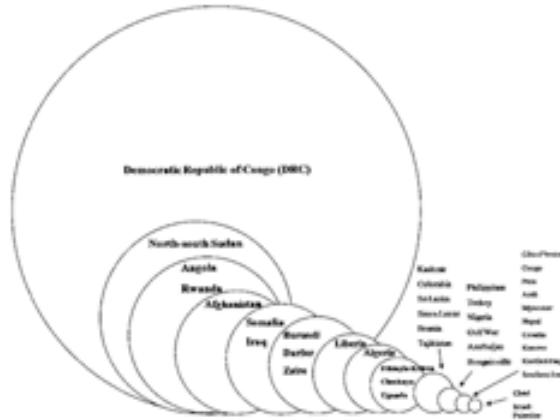
1990년대 아프리카는 냉전시대 강대

국에 의해 유지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세력균형이 와해된 상태에서 극도의 혼란과 분쟁을 맞이하게 된다. 1975년부터 시작된 앙골라 내전은 2002년 반군 UNITA 지도자인 조나스 사빔비가 전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94년 르완다의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암살로 격발된 후투족의 투치족 인종 학살로 3개월간 80만 명이 사망하였고, 투치족 반군에 패배한 후투족 난민 2백만 명이 자이르(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로 이동하였다. 이 여파로 자이르에서는 1996년 로랑 카빌라가 이끄는 반군이 투치계인 르완다, 우간다의 지원을 받아 모부투 정권을 전복시키고 콩고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98년 자이르 전복에 기여한 투치족 축출과정에서 제2차 내전이 발생, 르완다와 우간다군이 콩고를 침략하고,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군이 콩고 정부군을 지원하는 등 국제전으로 확산되었다.¹⁸⁾ 1996~2001년간 콩고의 1, 2차 내전중 5백 4십만 명이 사망하여 ‘제1차 아프리카 대전’이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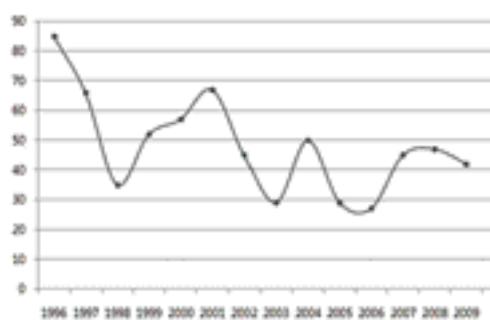
남부 수단에서는 내전과 이에 따른 난민 발생, 기아로 1983~2005년간 2백만 명이 사망하였고, 소말리아에서는 1988~1995년간 40만 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준무정부상태로 소말리아 연안은 물론 인도양까지 해적들이 창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브룬디, 라이베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에서 각각 10만 명~30만 명이 사망한 내전이 발생하였고,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세네갈, 기니, 기니비사우, 차드, 말리,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크고 작은 유혈분쟁이 발생하였다.¹⁹⁾



〈그림 3〉 Post-Cold War conflict death tolls in proportion (Virgil Hawkins, Stealth Conflicts)

그러나,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분쟁과 내전이 1990년대 말부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여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알제리, 라이베리아 등 이 분쟁 종식후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현재 수단,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등 3개국 정도로 내전지역 및 내전강도가 감소하였다. 아울러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도 가나, 탄자니아, 모리셔스, 세네갈,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그림 4〉 아프리카 정정불안도(Calculation on 'Marchés Tropicaux et Méditerranéens', OECD)

이러한 아프리카 정치 안정화는 세계화와 블록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각국들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기구가 활성화되어 지역 분쟁방지 및 세력균형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고²⁰⁾,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 개발을 위한 지역적 자구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60~1970년대	2000년대
1. 세계질서	냉전 / 양극체제	다극체제 / 신홍국 부상
2.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 경제블록화	세계화(다국적기업) / 신자유주의
3. 기술혁신	제조업(항공우주, 교통, 통신, 전자) / 건설업	제조업 기반의 ITC, 환경, 생명과학 / 서비스업(금융)
4. 아프리카정세	내전 및 쿠데타 / 일당 독재	분쟁 감소 추세 / 다당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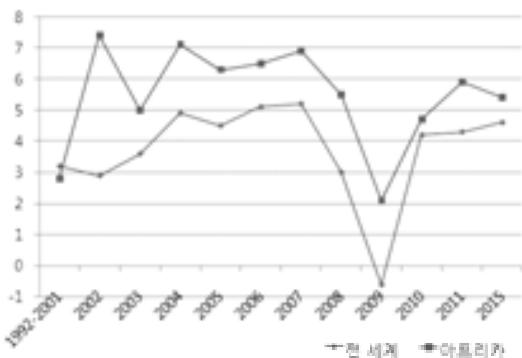
〈표1〉 1960~1970년대와 2000년대 세계 질서의 변화 (필자 작성)

이러한 아프리카 정세 안정화와 함께 앞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경제가 발전을 시작한 1960~1970년대와 현재의 세계질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 각국들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눈을 돌리면서 아프리카는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지구촌의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의 교역상대국이 다변화되고,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향후 아프리카 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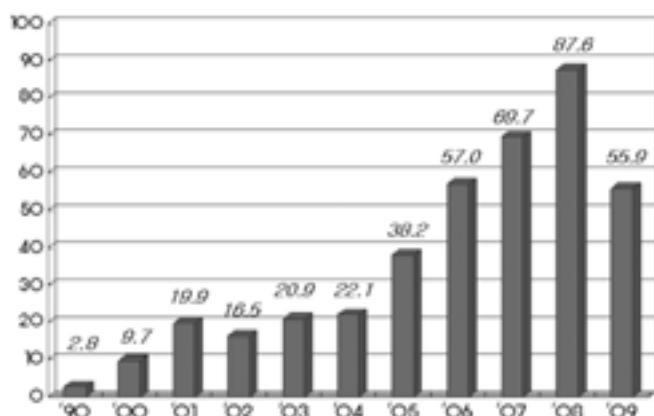
이러한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는 아프리카가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개발경험 중 현 시대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찾아 콘텐츠



〈그림 5〉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추이 및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2010, IMF)

화해야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내륙국들에게도 농업이나 제조업 외에 새로운 산업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ICT 강국인 우리나라와의 전자정부, 와이브로망 구축 등 기술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그림 6〉 아프리 FDI 유입액 추이 billionUS\$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2010), 2009년 FDI 유입액은 세계경제침체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상승세 지속 전망

V. 맷음말: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개발과정, 아프리카의 현 상황과 국제질서 등 앞서 검토해 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개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단순한 과거 정책의 답습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을 성공으로 이끈 주된 가치나 원동력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분야와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경제개발을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이끈 주된 추동력은 무엇보다 (1) 사회안정과 국민 결속 (2) 국민 교육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 (3)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 (4) 국방·안보의 확보 등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이 거대담론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영한 구체 사업들을 찾아 현재 아프리카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경험 공유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포괄적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안정과 국민결속’ 측면에서 식량안보 지원과 농업기술 협력이 무엇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전근대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농촌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²¹⁾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공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을 1970년대 개발운동의 중심으로 만든 ‘새마을운동’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자급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하면서 산업화의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해 주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농업기술 전수의 효과는 가나 새마을농장에서의 벼농사 교육 결과,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 보급, 캐냐 자전거 탈곡기 보급 등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이어지면서 가능성이 입증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협력을 통하여 우리는 아프리카 기층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크게는 사회안정에도 기여를 하는 셈이 된다.

‘교육정책과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우선 우리나라 실업계 고교 육성 등 산업전략적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실업계 고교를 적극 육성하여 고교 졸업후 산업화와 중동 건설진출 등을 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였고, 이들은 가계소득 증대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교육정책 경험 공유와 아울러, 직업훈련소 건립, 초·중등학교 건립, 도서관 건립 등 기초교육환경 및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이끄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편적 교육(특히, 초·중등 및 실업교육)과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우리나라 개발 경험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그것은 국민들의 열성적인 교육열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2009~2012년간 아프리카로부터 총 5천 명 이상의 연수생을 초청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통한 정책자문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되, 정책자문 이거대담론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KOICA에서 시행중인 전문가파견 및 공무원 연수초청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공중보건, 무역 및 투자, ICT, 환경 및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구체 분야별로 정책자문을 지속함으로써 아프리카 각국 정책결정그룹에 지한·친한인사들을 확보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자차원의 협력과 별도로 아프리카 분쟁지역들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아프리카연합(AU)과의 공동협력사업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U는 중국, 일본, 인도, 터키, EU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결속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 2009년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시부터 AU와 파트너십을 수립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국방 및 안보’ 지원은 양자간 협력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를 요하겠지만, 다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프리카 평화·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는 일견 그간 KOICA 등을 통하여 우리가 수행해온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발경험 공유’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원조의 양적 규모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 기여 및 진출 확대를 위해 브랜드화하고 ‘상품화’ 해야 할 소재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적도기니, 가봉, 남아공,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등 10여 개국의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면서, 한결 같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이다.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한 양적 증대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개발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경험 공유 추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가운데 비교적 협력이 유망한 분야 등을 짚어 보았으며, 향후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경험 공유’가 ‘자신감의 공유’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의교**

註

- 1) 콩고민주공화국 죄셀 카빌라 대통령 방한 합동 언론인터뷰 (2010.3.30, 한겨레신문 이용인 기자)
- 2) 최영진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인터뷰, '아프리카의 내일을 가다, 눈앞 이득보다 미래의 국익에 눈돌려야' (2010.6.6 아비장,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
- 3) Peter J. Schraeder,『African Politics and Society, A mosaic in Transformation』(2004), 288-290 페이지
- 4) O Won-chol,『THE KOREA STORY』(wisdom tree 2009), 18-50 페이지
- 5) 김영미,『그들의 새마을운동』(푸른역사, 2009), 330-347페이지
- 6) 박복영 외,『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7)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부터 1998년 금모으기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민들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를 동일시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10.5.14자)는 한국에서 수출주도의 거대기업이 관치금융의 혜택을 받아 부채를 누적시켜오면서 외환위기시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일반서민들의 결속과 감동적인 운동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8) 폴 콜리어, 류현 읍김,『빈곤의 경제학 - 극빈국 10억 인구의 위기』(살림, 2010), 29-39페이지
- 9) 박복영 외,『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54-56페이지
- 10) 장하준, 이순희 읍김,『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2007)
- 11) 폴 콜리어, 류현 읍김,『빈곤의 경제학 - 극빈국 10억 인구의 위기』(살림, 2010)
- 12) 아프리카 53개국중 내륙국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등 15개국에 달하며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베냉, 토고, 김비아 등도 해안선이 좁아 내륙국에 가깝다.
- 13) 박복영 외,『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85-86페이지
- 14) 같은 책, 290-320페이지
- 15) Virgil Hawkins,『Stealth Conflicts - How the World's Violence is Ignored』(Ashgate 2008), 12-31페이지
- 16) 박승호,『박정희 정부의 대미동맹 전략 : 비대칭동맹 속의 자주화』(서울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485-584페이지
- 17) 현재 활동중인 아프리카 PKO는 UNAMID(수단 다르푸르 지역), UNMIS(수단), UNOCI(코트디부아르), UNMIL(라이베리아), MONUC(콩고민주공화국), MINHURSO(서부 사하라와 모로코), BINUB(브룬디), UNOGBIS(기니비사우), MINURCAT(중앙아, 차드) 등이다.
- 18) Martin Meredith,『The State of Africa - A History of Fifty Years of Independence』(Bob Geldof, 2006)
- 19) Virgil Hawkins,『Stealth Conflicts - How the World's Violence is Ignored』(Ashgate 2008), 12-31페이지
- 20) 현재 아프리카연합(AU) 외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IGAD),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아랍마그레브연합(UMA), 사헬-사하라 국가 공동체(CEN-SAD) 등 8개 지역별 공동체가 있다.
- 21) 박영호 외,『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7-13페이지